

논단



우리농업의 진로(進路) 어느 곳이어야 하나?

‘미래시장’ 국내·수입산 치열한 각축장, 절대 승·패자 없을 것
국제추세 순응하며 손익고려, 장기·체계적 농정위해 투자해야

■ 어무열/ 경산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문구를 자주 인용하는데, 이는 고대로부터 먹는 것은 국가의 근본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급격한 경제성장의 주역인 공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이윤의 창출이 어려운 농업은 홀대를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최근 농민들은 쌀 수매가의 안정적 보장을 요구하면서 정부가 발표한 쌀값 안정대책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농협 역시 앞으로 쌀값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며 정부 지침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곡물자급도는 1999년 기준으로 밀 0.1%, 옥수수 1%, 콩 9.1%이며, 전체적으로 사료용을 포함하여 29.4%에 불과하다. 아직 쌀 시장이 개방되지 않은 상태의 수치이고, 농산물은 수요의 가격탄력도가 상당히 낮아서 ‘아무리 가격이 올라도 사먹을 수밖에 없다’는 경제이론을 생각하면 우리 농업은 너무나 불안해 보인다.

케언즈그룹, 세계농업시장 개혁노력 거세

세계농업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8번째 다국간 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로부터 세계무역기구(WTO)의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금년 초 시애틀에서 열린 뉴라운드는 농산물도 공산물과 똑같은 수준의 관세(equal-footing)를 요구하는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들과 농업의 비교역적·다기능적 성격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농산물 수입국들의 입장 차를 확인하면서 아무런 합의 없이 결렬되었다. 특히 케언즈(Cairns) 그룹은 뉴라운드의 핵심분야인 농업부문에서 합의하지 못한 유감표명과 함께 WTO협상을 통하여 세계농업시장의 근본적인 개혁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미래의 국내 농산물 시장은 국내산과 수입산의 경쟁형태로 치열한 각축의 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내산의 경우 품질향상과



정부보조금 등의 수단으로 수입산을 막아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며 수입산은 우월한 가격경쟁으로 국내시장을 공략할 것이다. 양자는 상대방의 정책, 생산비용, 품질, 기후조건 등의 정보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는 항상 상호의존적인 행위의 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절대 승자와 패자는 있을 수 없다. 수입산의 가격이 국내산 가격보다 아무리 저렴하다 할지라도 경제적 측면과 더불어 국토보전의 차원인 환경문제, 사회문제 그리고 식량안보와 같은 다기능적 효과가 있는 국내 농업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소비자 기호찾아 품종 개발하고 유통경로 단순화로 적정가격 유도해야

우리농업의 생존을 위해 첫째, 국내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좋은 품종을 개발해야 한다. 국내 농업이 살아남을 방법은 한국인의 전통적인 입맛에 어울리는 품종을 유지·개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케인즈 그룹과 같이 농업생산성이 우월한 나라들과 비용절감으로 경쟁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품질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 소비자의 식미를

근거로 한 농산물 품질평가는 미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농산물 별로 이를 파악하여 육종 및 재배·저장방법의 개선이 필수적이며 품질에 대한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유통경로를 단순화하여 농민들도 제 값을 받을 수 있고 소비자 역시 복잡한 유통마진에서 오는 높은 가격을 지불하지 않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넥타이를 맨 중계업자들이 농민과 도시근로자들의 땀의 대가를 취하면 안 된다. 이와 동시에 판매단위의 다양화도 바람직한 전략이다. 지금까지 제일 작은 쌀 한 포대의 규격은 8kg정도인데 이를 소규모화 하여 1kg, 2kg정도의 쌀 포대가 있어야 하고, 심지어 자동판매기에서도 쌀을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한창 벌이고 있는 소비촉진운동은 애국심에 호소해서 될 일이 아니라 개개인 스스로 소비를 증가하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궁극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또한 농업부문도 전자상거래가 미래의 가장 중요한 유통채널에 틀림이 없으므로 이를 이용하는 전략도 수립해야 한다.



“

지금 우리농업은 급격한 세계화의 물결에 휩싸이고 있다. 이러한 때일수록 국내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선진국들은 왜 자국의 농업을 중시하는지, 우리농업의 진로는 어느 곳이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시점이다.

”

상품 생산자 위한 신뢰 · 쌀농가 소득보장제도 지속되어야

셋째, 그 상품과 생산자를 믿는 강한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수입 나물과 쇠고기가 국산으로 둔갑하지 말아야 하며 농협이 햅쌀 포대에서 묵은 쌀이 나와서는 안 된다. 따라서 농산물만 취급하는 유통업체가 등장하여 농산물시장의 자체상표를 개발함으로써 지금의 혼란스러운 상품의 이미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쌀의 경우 우리가 맹목적으로 선호하는 경기미에 대한 식미 테스트결과 품질과 가격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연구발표도 있다. 이는 가짜 경기미가 많이 유통되고 있다는 결론이고 이를 위반하는 사례에 강력한 법규정이 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넷째, 정부는 국내 총경작지의 60%를 차지하는 쌀 농업에 대해서는 재배면적당 일정비율을 지원하는 '쌀농업 직접지불제'를 적극 활용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운 쌀 농가소득을 유지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도시의 일반 서민들에게는 직접지불제는 농민들이 아닌 환경보전의 대가로 지불하는 세금이라고 이해를 해야한다. 즉, 농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좋은 환경이 형성되고, 환경이란 우리나라 모두가 공유하고 그 값을 지불해야하는 공재(public goods)이다. 그러나 농업생산에

대한 대가로 세금을 내는 사람은 없다. 농산물은 일반 공산품과 마찬가지로 최종생산물 가치로만 판단하는 사유재(private goods)로 생각하지 농산물의 생산과정이 우리에게 유익한 공공재라는 사실은 전혀 모른다. 공산물은 이에 비하여 생산과정에서 오는 문제점이 많다. 폐수와 대기오염 등 환경에 부정적인 면이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산물과 공산물을 똑 같이 사유재로 취급하고 농산물이 공산물에 비하여 경제성이 낮다고 홀대한다는 것은 아주 잘 못된 사고이다. 만약 농민들이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우려로 국내 농업을 포기한다면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농업정책, 일관성 유지 · 이론 타당해야

다섯째, 적어도 정부가 주도하는 농업정책은 일관성 유지와 함께 경제 이론적으로 타당해야한다는 바램이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쌀 문제만 보더라도 정부와 국책연구기관에서는 소비촉진을 활성화하여 수요측면으로만 쌀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다. 물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증가와 함께 과잉공급량을 상쇄할 수 있어서 이론적으로는 쌀 문제해법에 타당한 면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얼마나 실효를

거들지는 의문이다. 그 이유로 우리나라민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꾸준히 하락하여 1999년 기준으로 거의 95kg에 이르고 있지만 우리와 비슷한 식성을 가진 일본과 대만은 65kg, 58kg으로 현저히 낮다. 일본과 대만이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쌀 소비량 감소는 선진국으로 가는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올해의 쌀 공급 과잉 문제가 천재지변이 없는 한 내년에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내년에도 쌀 먹기 운동을 계속할 것인지, 쌀이 남으면 지원을 하고 쌀이 남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는 것이 과연 일관성이 있는 대북 정책인지도 묻고 싶다.

더욱이 2004년에 있을 쌀 재협상에서 분명한 사실은 앞으로 쌀 수입량은 지금 수입하고 있는 양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것과, 수입 쌀이 양조용으로 전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접 소비되어 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는 어떤 방법으로든 쌀 공급을 줄이고 그 대신 대체작물로 생산을 전환해야 근본적으로 쌀 문제를 풀 수 있고, 장기적으로 국가와 농민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다 과학적인 경제 이론적 접근은 공급측면이고 지금 생산조정외의 당위성을 공론화 할 시기이다.

선진국 농업중시 이유, 타산지석 삼아야

마지막으로 농업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농과 대학을 활성화해야 한다. 미국이 세계제일의 농산물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것의 이면에는 세계 최고의 농과대학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사정은 어떤가? 농대라는 이름이 부끄러운지 아니면 인기가 없어서인지 내용은 그대로 두고 생명자원대학이라는 식으로 명칭만 바꾸는 말장난에 아쉬움을 느낀다. 농업

을 사랑하고 농학전공을 자랑스러워 생각하는 교수와 학생들이 농대에 있어야 한다. 교육부도 BK사업에서 농업부문에 보다 많은 연구자금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다자간 무역체계 속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본 나라 중 하나로 세계의 무역질서를 확립하는데 동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시 말하면 무조건 농산물 시장 개방을 반대하는 소비니스트적인 입장이 아니라 국제추세를 따라가면서 적절한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인한 국가적인 손익을 고려하여야 할 시기이다. 공산품의 수출국인 우리나라는 농산물 무역상황이 농업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실제로 무역정책의 효과는 다른 경제부문에 상호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같은 농업부문에서도 다른 농산물과의 관계도 고려되어야 한다. 지난해 6월 7일 한국의 중국 마늘에 대한 관세인상으로 인한 사실상의 수입제한으로 중국정부가 보복한 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 금지조치는 좋은 선례라 할 수 있다. 만약 마늘이 아니고 쌀이었다면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했을 것이다. 따라서 오히려 적절한 농산물 시장 개방은 공산품 수출의 환경을 긍정적으로 조성할 수 있고 노동력 부재의 농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사회전체의 물가안정에도 이바지할 수 있어 실보다 득이 많을 수 있다.

지금 우리농업은 급격한 세계화의 물결에 휩싸이고 있다. 이러한 때일수록 국내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농정(農政)의 수립을 위한 투자는 결코 사치스러운 남의 문제가 아니다. 선진국들은 왜 자국의 농업을 중시하는지, 우리농업의 진로는 어느 곳이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시점이다. **농약정보**